이재명 국립현충원 참배 '통합 행보' 본격화

이 후보, 이승만·박정희 묘역 참배…첫 공식 일정 시작

윤여준 전 장관 영입 사실 공개…선대위원장 내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며 후보로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국민 통합과 위기 극복을 강조한 이 후보는 이승만 · 박정희 묘역을 참배하며 "국민의 에너지를 색깔과 차이를 넘어 한 곳에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민석 · 전현희 · 홍성국 · 김병주 · 송순호 최고위원, 조승래 수석 대변인 등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이 후보는 현충탑을 향해 분향 · 묵념한 뒤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꼭 만들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 후보는 이어 이승만 · 박정희 · 김영삼 ·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포스코 초대 회장인 박태준 전 국무총리 묘역을 참배했다. 그동안 민주당 내 논쟁거리로 여겨졌던 이승만 ·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며 '통합 행보'를 강조한 것이다.

이 후보는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제 · 안보 · 안전 모든 문제에 있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힘을 최대한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소위 말하는 통합의 필요성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기"라고 했다.

그는 이어 사자성어 '구동존이'를 언급하며 "좌우의 통합이든 보수와 진보의 통합이든 똑같아질 수는 없겠지만 차이는 차이대로, 공통점은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승만 ·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에 대해서는 "저도 이승만 ·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만 갖는 것은 아니다. 양민학살, 민주주의 파괴, 장기독재라는 어두운 면이 있고 한편으로 보면 근대화의 공도 있다"며 "음지 만큼 양지가 있고 동전은 앞면이 있는 거 처럼 뒷면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 묻어두자는 얘기가 아니다. 평가는 평가대로 하고 공과는 공과대로 평가하되 지금 당장 급한 것은 국민 통합이고 국민의 에너지를 색깔과 차이를 넘어 다 한 곳에 모아 희망적인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박 전 총리 묘역을 찾은데 대해서는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DJP 연합, 일종의 진보 · 보수 통합 정권의 일종의 옥동자다, 한번 찾아가보자'라고 (제안)했고 (저도) 동의해서 일정에 없던 박 전 총리 묘소를 한번 둘러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망인들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와 시민사회에 맡겨도 된다. 민생을 개선하는 것이 정치의 가장 큰 몫이기 때문에 가급적 지나간 이야기나 이념 · 진영 등은 잠깐 곁으로 미뤄두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다"며 "너무 한 쪽에 몰입하지 말고 양측면을 다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윤 전 장관은 평소에도 저에게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고언도 많이 해주신다"며 "윤 전 장관 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대표적인 인물로 윤 전 장관한테 '우리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한번 맡아달라'고 부탁했는데 다행히 응해주셨다"라고 했다. /뉴시스

민주 "보수 · 진보 구분 없이 선대위 구성"

"현장 밀착해 국민과 함께 호응하는 대선 캠프 꾸릴 것"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이념과 진영 구분없이 능력 중심의 현장 밀착형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선후보 경선 경쟁자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선대위 주요 직책을 맡을 전망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 인선과 관련해 "보수든 진보든 당 밖이든 관계없이 능력과 경륜 (중심으로) 국민 보시기에 괜찮다는 (분이라는) 판단을 두루 고려해 선대위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 "현장 속에서, 현장에 밀착해서 국민들과 함께 호응하는 캠프를 꾸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인선 계획과 관련해서는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는 중이다"라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전 장관 상임선대위원장 합류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결론 난 것 없고 논의를 하는 중"이라고 했다.

김경수 · 김동연 전 경선후보와 관련해선 "김동연 경기지사는 업무복귀해 공직자로서 선거 중립 의무를 맡고 있어 공식 역할을 맡을 수 없다"며 "김경수 전 후보는 당연히 역할을 많이 하실 것으로 본다. 지역이든 중앙선대위든 어떤 역할이든 당연히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당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北, 러 파병 인정…정부 "중대 도발 행위"

통일부 "국제규범 어기고 젊은이 무참히 희생"

북한이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식 인정한 데 대해 통일부는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 대한 북한의 파병이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임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자 해도 북한군 파병이 국제규범을 어긴 불법적인 행위이고 북한의 젊은이들을 정권 안위를 위해 무참히 희생시킨 반인권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진실은 결코 가릴 수 없다"고 했다.

또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한다"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와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병이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과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에 부합한다는 북한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유엔 헌장은 침략전쟁을 부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약으로 시작됐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다수의 안보리 결의들에 대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27일에 보낸 파병 관련 서면 입장문을 이날 공개했다. /뉴시스

검찰, 명태균 오늘 서울서 조사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속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명태균씨를 소환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명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명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후 첫 조사다.

검찰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와 2023년 보궐선거, 지난해 총선 등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특정 후보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된 미공표 여론조사를 수차례 진행했고, 이 비용을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씨가 대납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최근 사건 관련자들을 연이어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현재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대검 항의방문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명태균 게이트 관련자 출국금지, 소환조사 촉구 항의 방문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 대검 항의 방문…"명태균리스트 출국금지 · 소환조사해야"

진상조사단 "항의 방문 세번째…넉달째 핵심인물 조사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건희, 오세훈, 홍준표, 윤상현 등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의 출국금지 및 소환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찾았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대검 항의 방문만 세 번째인데 도대체 검찰은 넉 달이 넘도록 핵심 인물 누구 하나 제대로 소환조사 하는 법이 없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2월14일 '김건희 소환조사 가능성이 열려있다'던 검찰은 어디 있냐"고 되물은 뒤 "많은 포렌식 결과가 보도되고 수사를 촉구해도 제대로 된 수사나 소환조사 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윤석열, 김건희, 홍준표, 오세훈 등 명태균 게이트 핵심인물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라며 "오늘이라도 당장 홍준표를 피의자로 소환조사해도 모자랄 판에 애꿎은 사건만 전국을 '뺑뺑이' 돌게 만드냐"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줄곧 '윤석열 정치검찰'로밖에 볼 수 없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 한번 없이 표적 기소하고 윤석열 · 김건희 편에게는 봐주기 수사를 해 '내란검찰'이라는 비판을 듣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건희 특검으로는 다섯 번째, 내란 특검으로는 세 번째, 명태균 게이트 관련 특검으로는 두 번째로 발의된 이번 특검법들은 윤석열이 막고 검찰이 덮은 윤석열-김건희 비리와 내란종식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수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루 의혹을 받는 인물들에 대한 출국금지 및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뉴시스

김영록 "한 총리 대선 출마는 제2의 내란"

김영록 지사는 28일 "내란 동조자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선거에 나선다면 내란 종식은 요원해지고, 출마선언은 제2의 내란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한 총리는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총리이자 역대 최장수 총리로서 총체적 국정난맥을 책임질 2인자였음에도 불법 계엄은 제대로 막지도 않았고, 그 이후 내란세력에 동조하는 '내란대행'을 자임하듯 행동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내란 혐의자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것은 '윤석열의 아바타'임을 고백한 것이며 내란 동조자가 아닌 내란 주도자로서 보수의 아이콘이 되겠다는 정치적 야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비상계엄 만행을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는 털끝만큼도 없고, 대선 정국 심판으로서 국정을 공정 수행하겠다는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데다 국회 · 헌재에 맞서는 반헌법적 태도로 거부권을 남발하며 법치는 실종됐고, 관료생활 중 한때 호남 출신임을 부정했다는 일화가 있는 기회주의자로서 입신 영달을 위해 국익을 팔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뒤 분간도 못하면서 대선에 출마한다면 대한민국 정의는 어디가서 찾아야 하느냐"며 "한 총리는 이제라도 무망한 대권놀음에서 벗어나 과도정부로서 역할에 충실하길 엄중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정일 도의원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 시급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 광양2)은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물이용부담금 제도는 1999년 수도권 상수원을 시작으로 2002년 광역상수원까지 확대 시행되었으며, 상수원 보호를 위해 재산권 제한과 생활 불편을 감수하는 상류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수질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재 물이용부담금은 주로 정화시설 설치와 수변지역 토지 매입 등 물리적 기반 시설에 집중되어 있으며, 산림 보호 및 관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정일 의원은 "수계 상류지역의 산림은 다양한 생태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산림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강조하며,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근본 취지와 어긋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산림 보호 및 관리 사업에 물이용부담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림 관리 인력, 장비, 교육 등 국가적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예결위 추경 힘겨루기…민주 "추경 규모 미달" 국힘 "속도 중요"

'대선 출마 유력' 한덕수 비판도…"오늘이라도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며 추경 규모가 경기 회복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산불 피해 복구 · 지원에 집중해 예산을 신속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정부 추경안을 두고 "추경 목적이 매우 불분명하다며 "이번 추경으로 어려운 돈, 큰 돈을 쓰는 것이라면 이 돈을 써서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정책 시그널을 시장에 분명하게 보내야 한다"고 봤다.

또 "추경 규모가 시장과 국민 기대에 비해 미달"이라며 이걸 갖고 어떻게 경기를 회복한다고 하나"라고 물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골목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들 매출을 올리는 효과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할인 비용을 (추경안에) 집어넣으라"며 "경제부총리가 이 부분 용단을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같은당 윤준병 의원도 윤 정부 정책 기조를 비판하며 추경 편성 시점을 실기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정부가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관련 예산 증액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어민과 관련된 농식품부 · 해수부 예산이 기껏해야 1500억원 정도"라며 "관련 예산 증액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에 순직한 헬기 조종사 2분의 추락 원인은 헬기 노후화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노후 헬기 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응 시기가 구체화돼야 한다. 헬기 조종 인력의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게 나타났다. 기장들의 신체 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집이 없고 먹을 게 없는 이재민들의 건강이 굉장히 위험하다. 주택 부분 등에 시급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한덕수, 내달 1일 사퇴 · 2일 출마 선언 유력

대선 캠프 기조는 '경제 · 통합 · 안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다음달 1일 사퇴하고, 다음날인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 측은 '경제와 통합, 안심'이라는 기조를 세우고 대선 캠프 구성에도 본격 착수했다.

한 대행 측 핵심관계자는 28일 "한 대행이 다음달 1일 사퇴한 뒤 다음날인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안다"며 "'경제와 통합, 안심을 기조로 캠프를 꾸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념, 진영을 떠나 국가 발전과 안정을 원하는 모든 세력을 통합할 것"이라며 "더 이상 국민이 정치 걱정을 하지 않도록 모든 갈등을 녹여내는 화합의 용광로 캠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손영택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손 실장은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도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돕기 위해 일부 총리실 다른 참모들도 사표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대행은 오는 30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과의 만남 일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관세협상에 영향을줄 수 있는 조선업과 해양안보 협력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 대행이 펠란 장관과 접견을 한 이후 다음날 사퇴하는 것으로 'D-데이'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